

스페인 SPAIN



스페인 의회, 유급 생리휴가 법안 가결

곽 서 회 에라스무스 로테르담 대학(Erasmus University Rotterdam) 국제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객원연구원

참고자료

- AP News (2023.2.16) "Spain approves menstrual leave, teen abortion and trans laws", <https://apnews.com/article/abortion-politics-spain-government-europe-e78fb56160f4bc9f40dc231602059b96> (접속일: 2023.2.22)
- BBC (2022.5.12) "Spain plans menstrual leave in new law for those with severe pain",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61429022> (접속일: 2023.2.22)
- Euronews (2022.12.15) "Spain votes to approve a new law to introduce paid 'menstrual leave' for painful periods", <https://www.euronews.com/next/2022/12/15/spain-votes-to-approve-a-new-law-to-introduce-paid-menstrual-leave-for-painful-periods> (접속일: 2023.2.22)
- Euronews (2023.2.16) "Painful periods? Spain just passed Europe's first paid 'menstrual leave' law", <https://www.euronews.com/next/2023/02/16/spain-set-to-become-the-first-european-country-to-introduce-a-3-day-menstrual-leave-for-work> (접속일: 2023.2.22)
- France 24 (2022.12.16) "Spanish lawmakers advance 'menstrual leave' legislation, a first for a European country", <https://www.france24.com/en/europe/20221216-spanish-lawmakers-advance-menstrual-leave-legislation-a-first-for-a-european-country> (접속일: 2023.2.22)

2022년 12월, 스페인 하원에서는 여성의 생리휴가 실시, 공공병원에서 임신중지 의로서비스 이용 가능한 연령 하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가결되었다. 본 법안은 재생산 권리와 관련된 정책 개혁을 목표로 정부에서 상정한 법안으로, 찬성 190표, 반대 154표, 기권 5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그리고 이번 달 초, 해당 법안은 찬성 191표, 반대 60표, 기권 91표로 상원까지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스페인은 유럽에서 여성의 유급 생리휴가를 법적으로 도입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여성 근로자는 매달 유급 생리휴가 3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통증이 극심한 경우에 한해서는 최대 5일까지 연장하여 유급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생리휴가 급여는 고용주가 아니라 정부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지급한다. 이웃 국가인 이탈리아에서는 2016년 3일간의 유급 생리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의회 임기 내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현재 생리휴가를 법적으로 제도화한 국가로는 한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잠비아가 있다. 국가별로 유·무급 여부, 휴가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상이하다.

해당 법안에 대해 이레네 몬테로(Irene Montero) 평등부 장관(Minister of Equality)은 의회에서 "이번 법안이 실제 시행되면 반대하는 입장이 곳곳에서 제기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성주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에는 항상 반대하는 목소리가 따라다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몬테로 장관은 현 정부는 여성의 생리를 건강 관련 권리의 일부로 보고 있으며, 이번 법안은 여성의 생리에 부여했던 여러 사회적 추종글씨에 맞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여긴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여성 유급 생리휴가를 담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었다. 심지어 여당 연합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고, 노동조합들도 본 정책안에 각기 다른 입장들을 내놓았다. 스페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동조합 중 하나인 노동자총연합(UGT, General Union of Workers)에서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고용주가 여성 고용을 주저하게 되는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언제 출산할 계획이 있는지와 같이 남성이라면 받지 않을 질문들을 받는데, 이에 하나 더 추가되어 앞으로는 생리통이 심하냐는 질문까지 듣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반면 스페인의 또 다른 주요 노동조합 중 하나인 노동자위원회(CCOO, Workers' Commissions)에서는 생리휴가라는 개념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실질적인 법안 내용 일부를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바로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려면 생리로 인한 통증이 심하고 휴가가 필요하다는 의사 조건서를 받아 증명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여성이 유급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문제가 여성 본인이 아닌 의사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위원회(CCOO)에서 성평등 및 근로 환경 관련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 한 담당자는 수많은 여성들이 참기 힘든 생리통을 겪지만 대다수는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스페인의 유급 생리휴가 법안을 두고 유럽 내 일부 여성단체들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유로뉴스(Euronews)의 보도에 따르면, 한 프랑스 여성단체 대표는 이번 스페인 사례에 대해 매달 며칠간의 휴가를 주는 것만으로는 심각한 통증으로 고생하는 여성에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성 근로자를 집에서 쉬게 해주는 제도보다는 생리통과 자궁내막증과 같이 여성의 건강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 구축 및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주장과 마찬가지로, 유급 생리휴가 도입으로 고용주가 오히려 여성 구직자와 남성 구직자를 차별하는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포함하는 또 다른 내용은 임신중지 의로서비스 이용 연령하향이다. 앞으로는 16세 이상이면 아직 미성년자이더라도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스페인은 1985년 임신중지를 법적으로 금지했었으나 2010년 합법화했다. 하지만 스페인 사회 내 통념상 지속적으로 논란이 이어진 주제이기도 하다. 스페인에서는 의사의 양심적 거부권 행사로 인해 공공병원의 임신중지 시술 비율이 약 15% 수준에 그치고, 상당수가 민간 의료시설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는 종교적 영향으로 의료진들이 양심적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법에서는 공공병원에서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권리를 강화했다. 물론 의료진이 사전에 이미 양심적 거부권에 서명한 사람인 경우, 임신중지 시술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앞으로는 학교 및 교도소에서 여성들에게 생리용품을 무상 제공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생리용품뿐만 아니라 경구피임약 및 사후피임약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2022년에 스페인 정부는 생리용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폐지에 관한 계획도 발표한 바 있으나, 최종 의회 표결 당시 이 내용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다음 예산안 심의에서 이 부분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이 스페인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면서 여성이 유급 생리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반면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번 법안이 오히려 여성 고용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 역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스페인 정부는 직장 내 여성의 유급 생리휴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행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국 UNITED KINGDOM



영국의 여성과 여아들을 위한 '안전한 거리(Safer Streets)' 제도

임 대 해 런던엘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참고자료

- BBC. (2022.3.7), "Safer Streets Liverpool launched to make transport safer for women", <https://www.bbc.com/news/uk-england-merseyside-60645751> (접속일: 2023.2.17)
- GOV.UK (2022.7.25), "Safer Streets Fund continues to make streets safer", <https://www.gov.uk/government/news/safer-streets-fund-continues-to-make-streets-safer> (접속일: 2023.2.20).
- GOV.UK (2023.1.11) "Safer Streets Fund is building confidence in the police" <https://www.gov.uk/government/news/safer-streets-fund-is-building-confidence-in-the-police> (접속일: 2023.2.20).
- The Wall Street Journal (2021.9.23.), "What Happened to Sarah Everard? The London Woman Whose Death Prompted a Safety Debate in the U.K.", <https://www.wsj.com/articles/sarah-everard-uk-11615823395> (접속일: 2023.2.17).

2021년 3월 런던의 변화가에서 사라 에버라드(Sarah Everard)라는 여성이 밤에 집에 가는 길에 경찰에게 납치된 후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은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위협에 대한 분노를 촉발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 정부(UK Government)는 가로등과 보안 카메라의 수를 늘리기 위한 예산 증액, 클럽과 기타 야간 영업장에 잠복 경찰을 파견하는 시범 프로그램 등 밤길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 에버라드(Sarah Everard)의 강간 및 살인 혐의로 현재 경찰관이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많은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가중되었고, 여성들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다. 해당 사건은 '안전한 거리(Safer Streets)'제도의 확대를 촉구하였고, 영국 내무성(Home Office)은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영국 내무성(Home Office)은 해당 사건을 계기로 영국의 우범지대에 가로등과 보안 카메라 수를 늘리고, 경찰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밤길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안전한 거리(Safer Streets)' 제도는 54%의 여성이 밤에 버스와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고, 40% 이상이 낮에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안되었다. 2022년 해당 예산은 확대 되었고, 해당 제도에 대한 평가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본문에서는 영국에서 시행하는 '안전한 거리(Safer Streets)' 제도의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제도에 대한 평가 내용을 살펴본다.

'안전한 거리(Safer Streets)' 제도 동향

- 2019년, 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지속적이고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persistently and disproportionately affected residential areas)" 주거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2,500만 파운드(한화 약 390억 원)를 '안전한 거리 기금(Safer Streets Fund)'에 지원할 것을 발표했다.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즈(Wales) 전역의 경찰국(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은 각 구역의 상황에 맞는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이용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상황 개입에 최대 55만 파운드(한화 약 8억 6천만 원)의 자금을 입찰할 수 있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영국 내무부(Home Office)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대한 개입을 연장한 후, 35개 경찰서에서 입찰에 참여하여 52개 지역에 대한 '안전한 거리(Safer Streets)' 제도를 실시했다. 내무부 장관(Home Secretary)은 2022년에 영국이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즈(Wales) 전역의 지역사회에 5천만 파운드(한화 약 78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여 더 많은 지역에 '안전한 거리(Safer Streets)'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 '안전한 거리 기금(Safer Streets Fund)'은 지역사회의 경찰, 지방 당국(local authorities), 교통경찰 및 적격한 지역 사회 단체에 지원되어 공공장소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이웃 간 범죄 및 반사회적 행동을 예방하는 데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에 CCTV와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범죄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활동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머지사이드(Merseyside) 지역의 대중교통 운전자와 관계자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위협행동에 대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받아 범죄를 이해하고, 더 많은 승객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위협이나 불편함을 느낀 승객은 해당 지역의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안전한 공간(Safe Space)에서 문자 메시지로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다. 이처럼 '안전한 거리(Safer Streets)' 제도는 영국 전역의 거리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한 거리(Safer Streets)' 제도에 대한 평가

- 영국 내무부(Home Office)는 2023년에 '안전한 거리(Safer Streets)'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현재까지 절도, 강도, 반사회적 행동,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등 지역 범죄를 줄이기 위한 27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즈(Wales)의 경찰, 지방 당국, 교통경찰, 그리고 적격한 시민 사회 단체는 총 4회에 걸쳐 1억 2,000만 파운드(한화 약 1900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았다.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한 거리(Safer Streets)' 기금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보다 안전한 장소라고 느끼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에 참여한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찰이 안전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자물쇠, 카메라가 설치된 초인종 그리고 경보기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알렸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대답했다. 이는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했던 지역 주민들의 기존의 인식을 개선한 성공적 사례이다. 실제로 햄프셔(Hampshire) 경찰국장(Police and Crime Commissioner)에 의하면,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여성과 여아에 대한 반사회적 범죄가 45% 감소하였다고 한다.

- 또한, 해당 제도는 지방 당국(local authorities)과 경찰, 그리고 교통경찰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이해 당사자들의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범죄율이 감소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전에 비해 거리나 대중교통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여성과 여아에 대한 젠더기반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거리(Safer Streets)' 제도는 현재까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데믹의 영향이 감소하고, 거리에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때에도 영국 전역의 '안전한 거리(Safer Streets)'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